

2014 지방직 사회 해설[김대근 강사]

[1번 해설] ④

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사무 처리의 원칙)

<제1항>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2번 해설] ③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frac{(\text{수요량의 변동분}/\text{원래의 수요량})}{(\text{가격의 변동분}/\text{원래의 가격})}$$

$$\text{수요의 가격 탄력성} = (18/300)/(150/1,000) = 0.4$$

[3번 해설] ③

(가)는 탈관료제 (나)는 관료제이다.

①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나)관료제의 특징이다.

②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나)관료제의 특징이다.

③ (나)관료제는 (가)탈관료제에 비해 부서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한 것은 (가)탈관료제의 특징이다.

관료제	탈관료제
• 수직적, 하향식, 중앙집권적	• 수평적, 상향식, 분권화 조직
• 자율성, 창의성 결여	• 자율성, 유연성, 신속성
• 안정성, 정규직, 고정급, 형식·절차 중시	• 안정성 결여, 계약직, 성과급, 업무 중심
• 중간관리자 역할 중요	• 중간 관리자 역할 축소
• 근대 산업사회에 효율적	• 정보화 사회

[4번 해설] ②

평등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에 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인 1표제의 원칙(one man, one

vote)과 투표가치의 평등원칙(one vote, one value)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5번 해설] ③

③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러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憲裁 95. 7. 21. 93헌가14).

[6번 해설] ③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ㄱ. (갑)기능론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갈등론은 학교는 지배 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ㄹ.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것은 미시론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이론적 배경		사회유기체설(스펜서)	계급투쟁설(마르크스)
전제		• 사회는 상호 의존, 보완, 조화 • 현상 유지의 속성	• 대립, 갈등, 투쟁, 긴장 • 현상 파괴적 속성
강조점		사회 질서 유지와 통합에 초점(현상 유지의 균형적 측면) : 보수적 관점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관계에 초점(현상타파적 변화의 측면) : 진보적 관점
계층화		• 희소가치의 차등배분은 사회적 합의 • 계층화는 일에 대한 동기 부여	• 지배집단이 강제 •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함
갈등		• 예외적·비정상적 현상 • 사회병리현상으로 간주 • 가만히 두면 균형을 찾음	• 보편적·필연적 현상 •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사례	청소년 문제	가족과 사회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청소년 문제 발생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층 구조가 청소년 문제의 원인
	정리 해고제	정리 해고제가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기 조절을 위해 나름대로 기능을 한다고 봄	정리 해고제가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봄
	법	법은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한다고 봄	법을 기득권층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봄
	학교	구성원의 사회화, 인재 선발과 양성 기능을 담당	지배 집단의 가치 주입,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곳

비판	• 지배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보수적 관점 • 갈등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간과 • 급격한 사회변동(ex 혁명)을 설명하기 곤란함	• 사회 변동을 강조하여 사회 안정과 질서,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경시함 • 사회 각 구성 요소들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명하기 곤란함
-----------	--	--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본입장	• 사회 문화 현상은 주관적인 행위 동기와 목적을 지닌 인간에 의해 발생함 •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현상들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해야 함 • 개인의 능동적 선택 중시 • 상황정의(사회적 행위에 상대방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지게 된다.
비판	개인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하고 있음

[7번 해설] ②

-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100\text{원} \times Q_1$, 즉 $b + d$ 에 해당한다.
- ② 정부의 조세 부과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 ③ 정부의 조세 부과로 사회적 잉여는 $c + e$ 만큼 감소하여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 ④ 정액세 100원 부과로 시장 가격이 60원 상승하였다. 소비자의 부담액은 1개당 60원, 생산자의 부담액은 1개당 40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8번 해설] ①

- ①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위반이 될 수 있다.
- ②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위법하다).
- ④ 초·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憲裁 00. 1. 27. 99헌마481).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판례를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大判 91. 5. 28. 90다17972).

[9번 해설] ③

- ① 마르크스의 입장(갈등론)은 사회 변동의 원인을 사회 내부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 ②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한다고 본다.
- ③ 경제적 토대(하부구조)에 의해 상부구조가 결정된다고 본다. 즉 사회변동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한 가지로 설명한다. 따라서 정치 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이다.
-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강조한다.

[10번 해설] ④

- ㄱ. 배분적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특별 상여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
-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다르게(여자 화장실을 더 넓게) 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다.
- ㄷ. 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의 포상금이 달리 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의 원칙에 해당한다.
- ㄹ. 공공 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의 원칙에 해당한다.

구분	평균적 정의(Corrective Justice)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내용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사회생활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한다.
표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성격	절대적, 산술적, 형식적, 교환적 정의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정의
사례	· 정치적 참여 기회의 평등(ex 선거권 보장) · 누구든지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는 것 · 노동과 임금 · 적법절차 · 모든 자동차의 우측통행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개인의 소득과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액 결정(ex 누진세) · 업적에 따른 조기승진 · 빈곤의 정도에 따른 보호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 사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 보호 · 범죄의 정도와 유형에 맞게 형벌 결정(ex 상습범죄자 가중처벌)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급

[11번 해설] ①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제1항).
- ② 국제법을 제정하는 범세계적인 입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렵고, 제재수단도 약하다.
-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12번 해설] ④

- ① ㉠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으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은 이익사회이다.
- ③ ㉢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시민연대는 공익을 추구한다.
- ④ ㉠~㉣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13번 해설] ②

- ①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는 사회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권은 현대적 기본권이다.
- ③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왕권신수설을 의미한다.
-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보는 것은 근대 이전의 인식이다.

★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천부 인권 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침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상이다.
개인주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가치가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이념
계몽사상	· 인간의 이성·주체성을 일깨움 → 절대군주제를 비판하며 합리적인 이성 · 탕을 둔 사회의 건설을 희망하였다. · 대표적 사상가 : 홉스, 흄, 로크,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
사회 계약설	·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권력을 창출했다는 이론이다. ·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 시민혁명의 발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입헌주의	기본적 인권과 국가의 권력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운영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14번 해설] ④

매키버(R.M. MacIver)는 그의 저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에서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넷째,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체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극찬, 「정치학」 중에서-

④ 대통령선거제도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는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지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와 거짓 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15번 해설] ③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 도입은 금융계정 5억 달러 수취(+)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 수출은 상품 수지 10억 달러 수취(+)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 수입은 상품수지 2억 달러 지급(-)
- 영국에 4억 달러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은 것은 금융계정 4억 달러 지급(-)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은 서비스 수지 3억 달러 수취(+)

-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흑자이다.
- ② 금융계정(대외거래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외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표시하는 계정)은 1억 달러 흑자이다.
-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 ④ 이전소득수지는 나와 있지 않다.

[16번 해설] ③

- ① <보기1>에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률은 증가한다.
- ② <보기2>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③ <보기 2>는 <보기 1>의 필립스곡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 ④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보기 1>에서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게 된다.

[17번 해설] ②

②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는 없다(大判 06. 1. 26. 2004다21053).

① 종업원인 B의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A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종업원 B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18번 해설] ①

① 상징적 상호작용론(미시적 관점)으로 사회 명목론에 해당된다.

②③④ 사회 실재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19번 해설] ①

A는 대통령제이고, B는 의원내각제이다.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미	대통령 중심	내각 중심
성립 배경	미국	영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엄격한 권력 분립 ⇒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권력 융합의 형태 ⇒ 입법부와 행정부는 유기적 관계
정부구성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함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함 ⇒ 내각과 의회는 상호 정치적 책임을 짐
국가원수	대통령	군주 또는 대통령
행정부 수반	대통령(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내각 총리(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일 뿐 국가 원수는 아님)
특징	엄격한 권력 분립(이원적) 정부의 의회 해산권 부인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부인 정부의 법률안 제안 부인 의원의 각료 겸직 금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권력 융합의 형태(일원적) 정부의 의회 해산권 인정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인정 정부의 법률안 제안 인정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장점	정국이 안정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 다수당의 횡포 방지(법률안 거부권)	정치적 책임에 민감 → 책임 정치 가능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 → 능률적 행정 처리
단점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우려 ⇒ 여소야대의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움 대통령 독재화의 우려 있음	소수당 분립 시 정국 불안의 우려 다수당의 횡포 우려

[20번 해설] ②

(ㄱ)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는 변함이 없는데, 고용률은 상승하였으므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ㄴ)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는데 실업률은 일정하므로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ㄷ)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 수가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감소하였다.

(ㄹ)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인구 수는 감소하였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 수는 증가하였다.